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핵 문제 주변국 입장과 비핵화 해법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다종화하는 데도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형화는 탄두의 중량이 1톤 미만이면서 직경 90cm 이내를 말한다. 다종화는 핵물질로써 천연 우라늄과 인공 플루토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그 위협성은 심각해진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무수단 중거리 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보다 핵물질의 수평적 확산 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중동 등의 테러 집단에 핵무기 또는 핵관련 기술·자재·인력을 유출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역내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미국 MD체제에 대한 일본의 편승,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지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최신 무기 체계 판매 등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국 내에서 북핵 고도화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북핵의 고도화를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탐지를 위해 동해 인근 수역으로 이지스함을 급파하고 일본 본토에서는 요격 준비를 갖추곤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핵무장국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냉전시대의 '영광 재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 대한 더욱 큰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이 각축을 벌이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입장도 다양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추진 전략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의 병행 전략이다. 외형상으로는 병행이지만 실제는 '선 압박, 후 관여'로 읽힌다. 전략적 수단은 외교적 고립·안보적 압박·경제적 제재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배제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배제하지 않는 듯하다. 대화의 조건이 핵·미사일 시험의 모라토리움인지 의심 지역의 사찰 약속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3원칙을 분명히 한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는 이행하지만 독자적인 제재는 반대한다. 최근에는 핵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미 대화든 북미중 3자대화든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유효성도 강조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편승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납치자 문제를 북핵문제보다 우선에 둔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협상 이전에는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많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9년이 흐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는 느낌이다. 제재·압박 및 대화·협상을 병행하여 두 가지를 상호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북한 핵은 체제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 군사훈련 등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북한의 현재 핵 동결, 미래 핵 해체, 과거 핵 폐기 등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종교칼럼

'임을 위한 행진곡'과 전례음악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112항은 다음과 같다.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성경은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118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규의 규범과 규정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전례음악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로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며, 둘째로 일치를 초래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전례 의식 안에 현존함을 더욱 더 깊게 느끼게 하여 의식을 거룩하게 한다. 대중성가는 라틴어로 cantus popularis religious,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성들이 부르는 종교성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자국어로 전례를 허용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전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례 중에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노래의 형태로 표현하여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작곡된 노래이다. 그리고 광주민주화항쟁이 1997년 정부 주관 공식 행사가 되기 전부터 불린 노래이며 국가의례가 되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의례에 참여하여 함께 부른 노래이다. 마치 축구 국가전에서 붉은 악마가 커다란 태극기를 펼치며 웅장하게 부르는 애국가처럼 광주민주화항쟁의 전율이 느껴지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의례를 풍요롭게 하는 전례음악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지난 몇 년 간 의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이 부르고자 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이 노래를 대신할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고 했고, 2010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가보훈처 정식행사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보훈처가 5·18 정식 노래 국민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고 여론에 밀려 새로운 노래를 만들지도, 그렇다고 방아타령을 틀지도 못하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은 못하게 막았다. 2014년에도 5·18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지정곡이 되지 않았다. 그 해에는 5·18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국가는 이 노래의 제창을 허락하지 않았다. 급기야 2015년에는 북한의 영화에 삽입된 노래이니 불러서는 안 된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작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국민 찬성은 55.2% 반대는 26.2%였다.

노래가 어려워서도 시민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냥 그 노래가 싫었던 것 같다. 5·18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다. 총성이 무서워 숨어 지낸 이들, 총부리 앞에 무서워 도망간 이들도 상처받은 이들도 함께 소리 높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숭고하게 떠난 우리 이웃들을 따르자며 소리 높여 부른 노래이다.

5·18은 광주의 전례이며 민주주의 전례이다. 전례에는 그날을 기념하며 노래를 부른다. 3·1절에도, 개천절에도 한글날에도 우리들은 그날의 노래를 모두가 부른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주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독 5·18을 부정하려는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례는 과거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는 노력인데, 전례를 완성하지 않고자 하는 이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게 한 것은 그래서 잘한 일이다. 함께 부르며 새로운 나라로의 도약을 빌며 기도했으면 한다.

기 고

국가 대개혁, 지방분권 개헌이 길이다

박 병 종
고흥군수·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2017년 5월 9일, 새 대통령 선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이제는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정의롭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이번 정권교체의 가장 큰 힘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컸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 축적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정농단으로 시작한 전 국민의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호하며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국정농단의 발단인 제왕적 대통령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는 기득권층 보호와 구시대적 유물로 대한민국의 온갖 모순으로 점철되어 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말뿐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시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촛불민심과 이번 대선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소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치적·법률적 권한과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하고 제대로 실행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정치권은 헌법 제1장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여 통치구조 개편 및 대통령 권력 분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수입 중 일정률을 법률로 정하여 지방재정의 몫으로 일괄 배분하여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스스로 살림을 운영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행의 주체가 아닌 중앙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수단에 불과한 허울뿐인 자치이다. 이를 실질적 자치로 바꿔야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일례로, 재난이나 안전·교육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난이나 안전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만 존재할 뿐 피해를 본 지역과는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유로운 행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들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주요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추진과정에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정착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이 실천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분권 개헌을 실천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다원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초당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은 국가 대개혁의 첫걸음이다.

社 說

5·18 유가족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났지만 그날 아버지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김소형(37) 씨. 그녀가 5·18 37주년 기념식장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고 추모 글을 읽던 도중 그녀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객석에서 그 장면을 보던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추모사를 마친 김 씨가 아직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무대 뒤로 퇴장하는 순간.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를 맨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대통령이 자신을 부르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대를 막 벗어나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참을 걸어간 대통령이 그녀를 껴안고 위로했다. 그녀 또한 대통령의 어깨와 허리를 두 팔로 안았다. 눈물의 포옹이었다. 이를 보던 많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업무 지시를 내려 제창할 수 있게 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양쪽에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작곡가인 김종률 씨도,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윤이 나는 유난히 까만 머릿결의 신임 피우진 보훈처장이 함께 부르는 모습도 좋았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다"고 했다. 또한 5·18 이후 광주교도소에서 단식하다 옥사한 전남대생 박관현 씨 등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유가족의 아픔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유가족은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퇴장할 때도 대통령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가족 등에 대한 깊은 위로와 지역민에 대한 각별한 존경을 표한 문 대통령은 "5·18과 촛불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5·18 공약 이행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희망이 보인다.

정치권 '오월 정책 경쟁' 협치로 실천하기를

정치권에서 5·18 정신 계승과 강력한 진상 규명 노력 등 '오월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조속한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물론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은폐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또 민주화운동의 왜곡 및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보수 야당도 37주년 5·18 기념일을 계기로 광주정신을 기리는 데 공감을 표명했다. 바른정당의 조영희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정한 국민 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역사적 진실 규명과 위상 재정립에 나선 것은 정치의 진보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롯한 광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5·18 특별법 개정안,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은 협치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야 각 정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無 等 鼓

희생(犧牲)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역시 '목숨'이다. 죽은 뒤에야 더 이상 무엇이 소중하고 필요하겠는가. 그래서인지,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은 '목숨'이었다. 페루, 잉카, 이집트, 중국 등 절대권력이 지배하던 고대 문명국가에서는 대부분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이 존재했다.

조선시대 고전소설인 '심청전'에도 효녀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제물이 되어 인당수 용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린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토목·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성이나 제방을 쌓는 대규모 공사에서 사람을 물속이나 흙 속에 묻어 신에게 정성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인주전설'(人柱傳說)인데, 민간설화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도 신라시대엔 아이를 제물로 바쳐 에밀레종을 만들어 내고, 고려시대 충혜왕 당시에는 '왕이 민가의 아이를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신라의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 성벽에서 1500여 년 전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발굴됐다. 성벽 유적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국내 최초인데,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이나 건물 아래에 매장하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제물이 된 사람이야 너무도 억울하고 한스럽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신 공양'이라는 습속을 만들어 내고 또 시행한 것은 바로 그의 이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원하는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과거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창업 공신들이 공직을 마다하고 잇따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고생한 인재들의 퇴장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통령이 새 세상을 열기 위해 국민에게 바치는 '희생'으로 봐도 될 듯싶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